

NK Insight

북한 금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

2023 | 제 2호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home.kpmg/kr

Contacts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김광석
센터장/부대표
Tel: +82 2 2112 0723
kwangseokkim@kr.kpmg.com

박철성
전무(Audit, 금융산업전문팀)
Tel: +82 2 2112 0437
chulsungpark@kr.kpmg.com

조진희
이사
Tel: +82 2 2112 7454
jinheecho@kr.kpmg.com

김규림
이사(경제연구원, 금융산업팀)
Tel: +82 2 2112 4089
gyulimkim@kr.kpmg.com

홍승표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2743
seungpyohong@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와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Page

Infographic Summary

3

왜 북한 금융인가?

4

북한 금융의 현실

5

공금융 시스템의 기능 약화와 사금융의 등장

5

성과가 미진한 금융개혁과 강화된 통제

6

전자금융 도입과 활용

7

참고: 북한의 금융업 관련 대외 협력사례

10

북한 금융의 SWOT 분석

11

체제전환국 및 CLMV 국가의 금융 개혁과 발전 과정

13

체제전환국의 정부주도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과 국제기구 가입

13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금융시장의 발전 과정

14

체제전환국·CLMV 국가의 금융 개혁과 발전 과정의 시사점

22

북한 금융 발전 방안

24

Stage 1 금융 인프라 구축

24

Stage 2-1 소매금융 서비스

27

Stage 2-2 개발·기업금융 서비스: 대북 투융자 방안

31

Infographic Summary



▶ 공공용 기능 약화와 북한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

1 공공용 기능이 약화되고 돈주 중심의 사금융 등장 경제난과 재정악화로 장마당 체제하 사금융이 주민들의 금융기관 역할	2 성과가 미진한 금융개혁과 강화된 통제 합영은행, 상업은행 허용 등 개혁 추진하나 성과 미미	3 전자금융 도입 노력과 전자결제시스템 활용 전자결제법 및 전자결제카드 도입, 모바일 전자결제 사용 독려
--	---	---

▶ 체제전환국 및 CLMV 국가의 금융 개혁과 발전 과정

 이원적 은행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기능 이원화 및 상업은행 활성화 상업은행제도 도입으로 예금을 통한 민간자금 활용, 신용평가 등 금융 인프라 구축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외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개발을 위해 해외자금 조달 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필수 별도의 '개발은행'(중국, 베트남) 설립 및 해외자금 유치·관리 	 부실채권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과 보조금에 익숙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대출상환 인식부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 미흡과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소액금융과 핀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문제 해결, 주민의 소득증대 위한 소액금융 활성화 휴대전화 보급에 따라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 향상 위해 핀테크 적극 도입
--	---	---	--

▶ 북한 금융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적 은행 체계 확립 - 금융 법규 및 제도 전반 구축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협력을 통한 원조, 융자 등 자금 지원 - 기술지원·정책자문 프로그램 	<p>[소매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금융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금융, 빈곤퇴치 핀테크 기술 도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결제, 슈퍼앱 전략 등 <p>[개발·기업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 투자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조, 민간투자지원, 특구 및 장려부문, 위험분담 기술개발 및 보건의료 금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시스템 발전과 금융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의 민영화 -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형성 - 보험(재보험)사업 활성화 - 금융시스템 효율화 - 금융시장 개방
Stage 1 금융 선결과제 해결	Stage 2 초기 금융업	중장기

왜 북한 금융인가?

“

추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금융부문 분석 필요

”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과 잉여가치의 추구를 통한 자본축적 자체를 부정하고, 계획경제체제에서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경제주체의 생산, 분배, 소비가 관리되며,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경제적 형태의 금융시장 형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1990년대 동구권 몰락과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 상당수는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공공용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중앙은행 중심의 공공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민간 경제주체 간 장마당이 확산·발전하면서 사금융은 생산에서 유통, 소비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공공용 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고, 상업은행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2021년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는 경제관리개선을 위한 '재정, 금융, 가격과 같은 경제적 공간의 활용'과 '자금순환'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과 자금 흐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2021년 북한이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최초로 제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서도 '정기적인 금융 흐름 및 활용도 평가를 통해 투자 효과를 높이고, 국내 은행권 대출을 활성화해 인민의 생활 개선과 경제발전이 촉진' 될 것으로 전망하며 자금의 흐름과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포괄적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폐쇄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이 급감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통제가 강화되며 금융부문의 개혁적 조치들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추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금융의 발전 잠재력이 높다. 본 보고서는 북한 금융의 현실과 과거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북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 개혁의 방향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북한 금융의 현실

“

북한의 사금융은
2002년 7·1조치 이후
부분적 시장경제 원리와
자율성 부여로 활성화,
돈주가 그 중심에 등장

”

공금융 시스템의 기능 약화와 사금융의 등장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경제 상황과 국가 재정이 악화되며 기관과 기업소의 생산능력 또한 현저히 저하됐다. 게다가 주민들은 배급 단절, 화폐개혁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당국과 은행에 대해 강한 불신이 형성되어 달러 거래와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일은행제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공금융은 역할과 권한이 상당부분 축소되고 돈을 중심으로 한 사금융이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사금융의 활성화 요인은 ① 1990년대 중반 배급 중단으로 확산된 장마당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② 북한 무역회사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요와 '외화장사꾼'의 등장, ③ 시장경제 원리를 부분적으로 채택한 2002년 7·1조치 이후 기관, 기업소가 독립채산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발생한 자금 수요의 증가로 분석된다. 사금융은 1980년대 환전, 1990년대 고리대, 2000년대 대부·투자 기능, 2010년대는 개인 간 송금 등 경제 주체 간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확대되었다.

사금융의 중심에는 신흥 부유층 '돈주'가 있다. 돈주는 개인 대상 환전과 고리대금업을 시작으로 예금·송금·대금 결제까지 역할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물화폐 거래, 부동산을 매개로 한 거래, 공장·기업소·상업시설에 대한 투자 및 운영, 개인과 협동농장 간 거래 등 건설·서비스업·제조업의 활성화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간 입사증을 담보로 한 사실상의 주택담보대출, 기업 간 물자대금 결제대행, 중국과의 거래와 북한 도시 간 물자거래대금 지급까지 관여하면서 각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의 사금융 형태

구분	주체/지역	상세 내용
고리대	농촌	• 당 간부들이 농장원들 대상으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기에 3~5배로 돌려받는 전통적인 방식의 고리대
	도시	• 소규모 사채 수준 고리대,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살아남은 돈주들이 월 5~20% 수준의 금리로 돈장사 영위
대부업	권력층	• 최고위층과 개인적 친밀도가 있는 기관·기업 간의 대부 거래로 이윤 추구 보다는 소수 권력층의 공생관계에 기반한 거래관계 형성
	돈주, 기업	• 돈주, 돈장사들이 개인 인맥을 활용, 직접적인 이윤 창출 보다 정치·경제적 보호 및 관계 형성 목적으로 기업에 대부하는 거래관계 형성
주택담보대출	개인	• 돈주에게 주택 입사증을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 형태
환전	개인, 기업	• 북한 사금융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래, 환전수수료를 통한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소비시장에서 외화가 통용되는 북한 현실에 따라 거래규모 큰 편
송금	개인	• 휴대전화 통한 수동으로 송금하는 시스템: 개인간 신용 거래(송금 브로커 대리해 송금액을 지급하고 수수료 수취) • 휴대전화 간 전화돈 송금
무역대금 결제대행	북한과 중국	• 북한과 중국 기업 간 물품 거래 시 대금의 지급·결제를 북한과 중국 양측의 밀수꾼(브로커)과 돈장사가 대행

Source: 한국수출입은행(2016), 언론보도 등 종합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성과가 미진한 금융개혁과 강화된 통제

“

김정은 집권 이후
합영은행 영업 허용,
지역상업은행 설립 등
금융제도 개혁을 통해
활로 모색

”

북한은 2012년 기업 간 현금계좌(현금돈자리)를 통한 합의가격 거래와 현금 외화계좌(외화돈자리)를 허용하였다. 2015년에는 상업은행법을 개정하면서 합영은행의 영업을 허용하고 12개 지역상업은행이 등장했다. 2021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7차 전원회의에서 ‘전자결제법’과 ‘영수증법’을 채택하면서 금융 디지털화에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경제개혁 조치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향에서 ① 모든 자금을 국가 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채산제 정착을 유도해, 재정 당국의 부담을 경감하고 ② 전자결제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고질적인 현금누수, 인플레이션 심화 및 달러라이제이션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①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가 부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통제권이 절대적이며 ② 주민들이 북한 화폐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세대들이 사금융에 익숙해지면서 북한 당국의 금융개혁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제재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의 여파로 국가 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재정법’을 개정하고 재정계획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금융부문의 경우 2020년대 들어서면서 강제저축 확대, 전화돈 사용 제한, 돈표 발행, 대부법 채택 등 민간 보유 유동성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 북한 당국의 금융분야 개혁 추진

2012	기업 간 현금 돈자리를 통한 합의가격 거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경제 시스템 붕괴와 북한 원화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각종 편법의 등장, 화폐개혁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 달러라이제이션 확산에 대응
	외화돈자리를 통한 기업보유 외화자금의 제도권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환율에 근접한 협동환율 적용, 내화현금 교환 허용, 기업보유 외화자금의 제도권 편입 시도
2014	주민과 기업 간 자금대차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중개기능 활성화를 위해 계약당사자(주민과 기업) 간 합의로 금리 결정, 만기 시 적시 상환 담보 위한 계약문서 보관, 공증 및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등 규정화
2016	합영은행 영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상업은행을 통해 예금의 비밀보장을 표방, 주민들 대상 외화 저축업무 류경상업은행은 1만 달러 이상 예금고객 골드, 5천 달러 이상 실버 우대카드 발급, 동일 그룹소속 상점 물품 구매 시 혜택 제공 등
	지역상업은행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은행, 평안남도은행, 평안북도은행, 강원도은행 등 12개의 지방상업은행 신설
2021	전자결제법, 영수증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활동 정보화를 통해 모든 금융거래가 은행계좌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효과 온라인 쇼핑몰과 휴대전화 전자결제시스템 지원

Source: 한국은행(2021), 산업연구원(2018),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

북한은 나래카드,
고려카드, 전성카드 등
전자카드 도입하고
사용 장려

”

전자금융 도입과 활용

(1) 전자결제카드의 보급 및 상용화 노력 - 나래카드, 전성카드 등

북한은 전자금융, 모바일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관리의 정보화를 추구하고 있다. 카드 사용의 제도화는 모든 금융거래가 은행계좌와 연동되어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민간 유동성 흡수 차원에서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추세다.

북한에서는 2010년 12월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충전식 전자결제카드인 ‘나래카드’가 발급되었고 이후 조선중앙은행, 특수은행, 합영은행에서도 전자결제카드가 발행되고 있다.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식당, 상점 및 호텔 등에서 전자카드 사용을 정착하도록 노력해왔다. 2015년 이후 북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류’에서도 나래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나래카드는 외화를 북한 원화로 환전 후 예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인데 2020년대 들어서면서 당국의 외화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당국이 외화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북한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며, 환전소 이용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외화충전카드의 사용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북한 원화충전카드인 전성카드는 나래카드보다는 상용화되었다. 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되고 명의자 한 명이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출금 관련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장마당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금인출기(CD기)는 전자결제카드를 발급한 은행에서 본점 및 지점, 공항, 호텔 등에 개별은행 단위로 설치해, 현재 조선중앙은행 지점과 체신국, 평양 내 순안국제공항, 류경상업은행, 고려호텔 등과 군단위 은행에도 CD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한의 전자결제카드

나래카드

- 2010년 발행
- 외화를 충전하여 호텔, 외화상점 등 사용 가능, 공식환율 반영
- 6개 화폐 동시 예금 가능



고려카드

- 2011년 발행
- 외화충전 카드
- 나래카드와 거의 유사한 기능 및 사용처



전성카드

- 2015년 발행
- 원화 충전 가능
- 입출금 관련 금융서비스 가능
- 외화 취급 상점, 장마당 등 사용 가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휴대전화 요금 일부를
활용, 개인 간 송금이
가능한 전화돈 활용
활성화, 2020년 이후
북한 당국의 제재로 사용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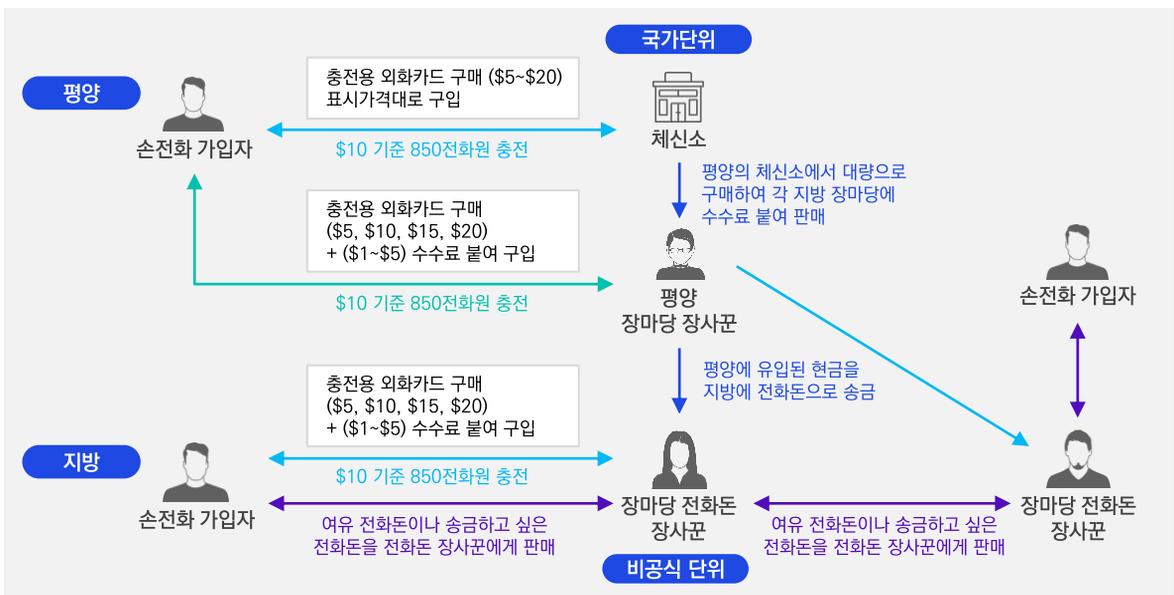
(2)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들의 금융활동 - '전화돈'

최근 북한 당국의 제한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전자결제·송금 방식은 휴대전화의 요금체계를 활용한 '전화돈'이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요금 충전 시 기본 제공되는 통화시간과 통보문(문자) 이외에 추가로 충전 가능한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휴대전화 사용자 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전화돈'으로 불리게 되었다. 전화돈은 사용이 간편하고 장마당에서 충전카드 거래가 가능하여 북한 주민들 간 소액송금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전화돈 전문 장사꾼도 등장하여 장마당에서 거래를 중개하며 사금융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7월 이후 북한 당국은 전화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충전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체신소에 방문해 직접 충전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회 충전 금액의 축소, 개인 간 전화돈 송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등의 여파로 장마당 활동이 축소되고 개인 간 송금 및 결제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화돈 사용은 급감하게 되었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북한에서 전화돈의 보급과 활용 사례는 ① 북한 내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환경과 ②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휴대전화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활동을 하고자 하는 니즈를 반영하고 있으며 ③ 전국적으로 전화돈 장사꾼이 등장하면서 사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추후 북한에서의 핀테크 기술의 도입과 보급이 보다 급격히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 북한 당국의 제재 이전 휴대전화 요금체계를 활용한 '전화돈' 장사 구조



Source: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20),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

북한 당국은
전자결제카드와
전자결제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 독려

”

(3) 전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노력 - 모바일 전자결제 프로그램 '울림 2.0'

북한 당국은 전화돈 사용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에게 전자결제카드와 스마트폰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성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 7월 조선중앙은행 전국지점에 자금을 지원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소에 단체로 카드를 발급하는 등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부터 북한에서는 모바일 전자결제 프로그램 '울림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울림 2.0'을 사용하고 있다. 울림 2.0은 등록이 가능한 현금카드의 범위를 확대해 중앙기관, 지방무역기관, 국가 승인 무역기관의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울림 2.0은 카드 사용만이 아니라 사용자 간 요금전송, 충전, 잔고 조회, 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간편결제 기능도 추가되었다. QR코드를 사용한 간편결제는 중국의 위챗페이 방식과 유사한데, 사용자 정보와 전자결제카드를 등록하면 QR코드가 생성되어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자금출처에 관한 당국의 통제와 보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전자카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결제카드와 전자결제시스템 울림 2.0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노력을 통해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음이 확인된다.



<참고> 북한의 금융업 관련 대외 협력사례

북한은 금융업 관련하여 조총련계, 해외교포, 네덜란드, 영국, 홍콩 기업 등과의 협력사례가 확인된다. 북한과의 합영·합작을 통해 현지 진출한 금융사들은 북한의 열악한 금융제도 및 대외 폐쇄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명	설립 목적과 운영 현황
조선락원금융합영회사 (조총련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7년 5월 조총련과 합작 설립, 북한 내각 소속 예금, 저축, 송금 및 무역회사·교포운영회사 등에 대한 투자
고려상업은행 (재미교포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년 11월 재미교포와 북한이 각각 500만 달러 씩 출자 합영으로 설립 LA 고려문화센터가 미주 내 대행 역할(금강산국제그룹과 연관된 은행) 민족통일공채 발행과 호텔신축사업 등 업무 2017년 9월 미국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고려상업은행 제재
고려금융합영회사 (조총련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년 조총련과 합작 설립 중개무역업무
조선합영은행 (조총련 조선합영추진위원회 - 조선합영추진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년 4월 조총련과 북한이 10억 엔 씩 분담하여 합영으로 설립 외국과의 합작회사에 자금 대출, 외국환 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업무, 해외결제 전문은행 2009년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를 근거로 미국 재무부 제재대상 포함
제일신탁금융합영회사 (조총련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2년 12월 합작 설립, 북한 인민무력성 소속 외환거래, 대외결제, 인민무력성 산하 기업소 외화관리, 외화벌이 귀금속 거래
고려은행 (조총련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년 7월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으로 설립된 투자기관인 고려금융합영회사를 개편하여 국가은행으로 설립 조선노동당 38호실의 대외결제업무 담당
대동신용은행 (홍콩 페레그린 - 조선 대성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년 2월 합영 설립, 자본금 750만 달러 북한의 수출입 결제 관련된 외환업무, 상업은행 업무, 라진·선봉 경제 무역 지대의 건설과 관련된 투자업무 목적 2013년 6월 27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포함 2016년 유엔안보리 결의 2321호의 자산 동결 2017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자진 탈퇴
ING-동북아시아은행 (네덜란드 ING그룹 - 조선국제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년 1,500만 달러 규모로 합영 설립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된 금융과 개발 계획 용자, 북한 내 대부업무, 북한 진출 희망 서방 기업 정보제공/용자 1999년 북한의 열악한 금융제도로 인하여 사업 철수
화려은행 (중국 인민은행 베이징·칭다오 분행 - 조선중앙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중국 인민은행 60%, 북한 조선중앙은행 40% 출자, 자본금 5천만 달러로 설립 투자신탁업무 진행
고려-글로벌신용은행 (영국 글로벌 그룹 - 고려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6월 합작, 영국 글로벌 그룹 70%, 고려은행 30% 지분 북한에 설립될 외국 회사 대상, 상업금융, 설비자금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외화예금, 고정금리예금, 자금신탁 및 외화송금 등의 업무 수행 위해 설립
우리은행 개성지점 * 개성공단 우리 기업·주재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12월 7일 개점 남한 기업 및 주재원 대상 송금, 환전, 계좌관리 등 제한적 역할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 중단 북한 측과 금융 협력 업무 미 실시

Source: 통일부 북한정보포털(검색일: 2023.8.23),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북한 금융의 SWOT 분석

“

시장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 향상과 휴대전화 사용 인구 증가는 강점, 공금융에 대한 신뢰도와 기능 약화는 약점

”

강점: 장마당을 통한 시장경제·금융에 대한 이해 향상

북한 주민들의 경우 장마당 및 돈을 중심으로 한 사금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시장경제와 금융방식에 대한 경험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 간에도 돈자리를 활용하거나 계좌이체 방식이 일부 허용되는 등 시장가격을 통한 거래 경험이 쌓이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다. 또한 휴대전화 보급이 증가하고 이를 토대로 한 금융서비스 확산은 향후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유리하다.

약점: 공금융 역할 부족 및 취약한 금융 인프라와 금융 신뢰도

북한 당국은 이원화된 금융제도,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금융의 역할이 약화되었고 금융 인프라가 취약하다. 또한 북한 투자와 관련해 과실송금 및 회수 등의 안정적인 제도도 미흡하다. 공금융의 원활한 역할과 대내외 신뢰도는 국가 운영을 위한 자본조달 마련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금융의 기능이 충분하게 작동되지 않아 주민들의 저축이나 기업의 예금이 미미하여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내부자금을 통한 자원조달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기회: 경제개발 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수요 폭발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시스템 및 시장이 출현하게 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조달에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였다. 이는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막대한 투자자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국가 경제와 기업 발전을 추동하였다.

북한 내 일정 규모의 자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상업은행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발전 초기 단계 시 막대한 자금 소요로 인해 금융기관의 역할 및 영업 지역 확대, 신규 신설 등이 불가피하다. 또한 전국적인 금융서비스의 보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 IT 정비, 은행 백오피스 정비와 컴퓨터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망보안 사업 등 전반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장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

북한 경제개발 시 금융
서비스 수요 급증 기회와
정치 리스크 및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문제 상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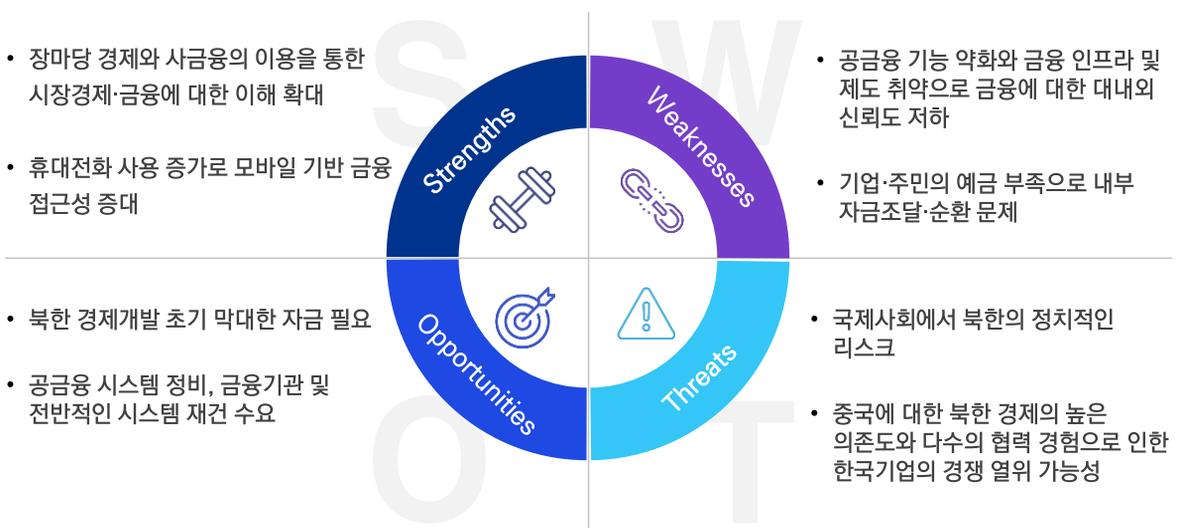
위협: 정치적인 리스크와 중국·러시아 등 경쟁 심화 가능성

금융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북한 투자에 적용되는 위협으로 남북한 및 한반도의 갈등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2008년 북한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한 이집트 기업인 오라스콤과 같이 이미 북한에 진출 경험을 보유한 기업이 있기에 향후 신규 사업자는 인지도와 경험 측면에서 경쟁 열위에 있다. 돈을 중심으로 사금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또한 북한 진출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투자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중국, 러시아 및 유럽 등에서의 적극적 시장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은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전체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의존적이며, 여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추후 금융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중국 금융시스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우리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북한 금융의 SWOT 분석



Source: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체제전환국 및 CLMV 국가의 금융 개혁과 발전 과정



체제전환국은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 국제기구가입 통한 투자유치 추진, 부실채권 발생 경험



체제전환국의 정부주도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과 국제기구 가입

체제전환국들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경제주체의 생산, 분배, 소비 전반을 국가가 계획·통제하였고, 신용기반 상거래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체제전환국들은 자본주의적 금융체계를 형성하고 자금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은 ① 이원적 은행제도 및 금융 인프라 구축, ②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대규모 차관 도입이 선행 과제였고 ③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겪었다. 또한 ④ 간접 금융을 통한 내부자금 조성 and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국내외 은행의 신규진입 제도를 정비하고 증권거래소를 설립해 주식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러한 금융개혁을 경제발전예 따라 점진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 전후 급진적으로 단행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은 금융개혁 초기 정부주도의 경제개혁을 통해 이원적 은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와 원조가 증가하면서, 동 자금의 합목적적이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개발 은행’을 설립했다. 그리고 국내 자금 및 국제 원조만으로는 소요 자금 총량이 원활하지 않아 IMF 등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외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체제전환국의 기업과 기관들은 상환의무가 없는 재정자금 사용에 익숙해 대출 상환에 대한 인식과 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이 미흡하였던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면서 부실채권 문제가 발생했다. 각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 채무자 조정 등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과 금융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금융개혁 시기별 특징

[중국]



[베트남]



Source: KDB산업은행(2018),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

CLMV 국가들은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경제발전,
금융시장은 초기 단계

”

CLMV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금융시장의 발전 과정

경제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은 시장 개방 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와 수출 확대에 따라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임금상승과 생산비용의 급증, 2011년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한 기술과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전략과 맞물려 섬유 및 의류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CLMV 국가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2021년 기준 CLMV 국가들의 지난 10년 간 GDP 성장률은 캄보디아 6.1%, 라오스 6.5%, 미얀마 6.8%, 베트남 5.4%로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맞춰 금융시장도 발전하고 있으나 베트남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CLMV 국가들의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형성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북한의 개방 초기 금융부문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유엔의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들어섰다. 1989년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고 1991년 최초로 상업은행이 출범하였다. 1996년 중앙은행법, 1999년 은행법, 2000년 보험업법, 2007년 증권법이 제정되면서 금융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캄보디아의 개혁개방 이후, 국내총생산(GDP), 공적개발원조(ODA),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93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2004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FDI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1989년 체제전환선언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상업은행 출범 등 제도적 기반 조성과 1990년대 파리평화협정 체결과 미국의 금수조치 해제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가 경제·금융 발전의 시작점이며 WTO 가입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 캄보디아는 체제전환 후, 경제제도 개혁과 국제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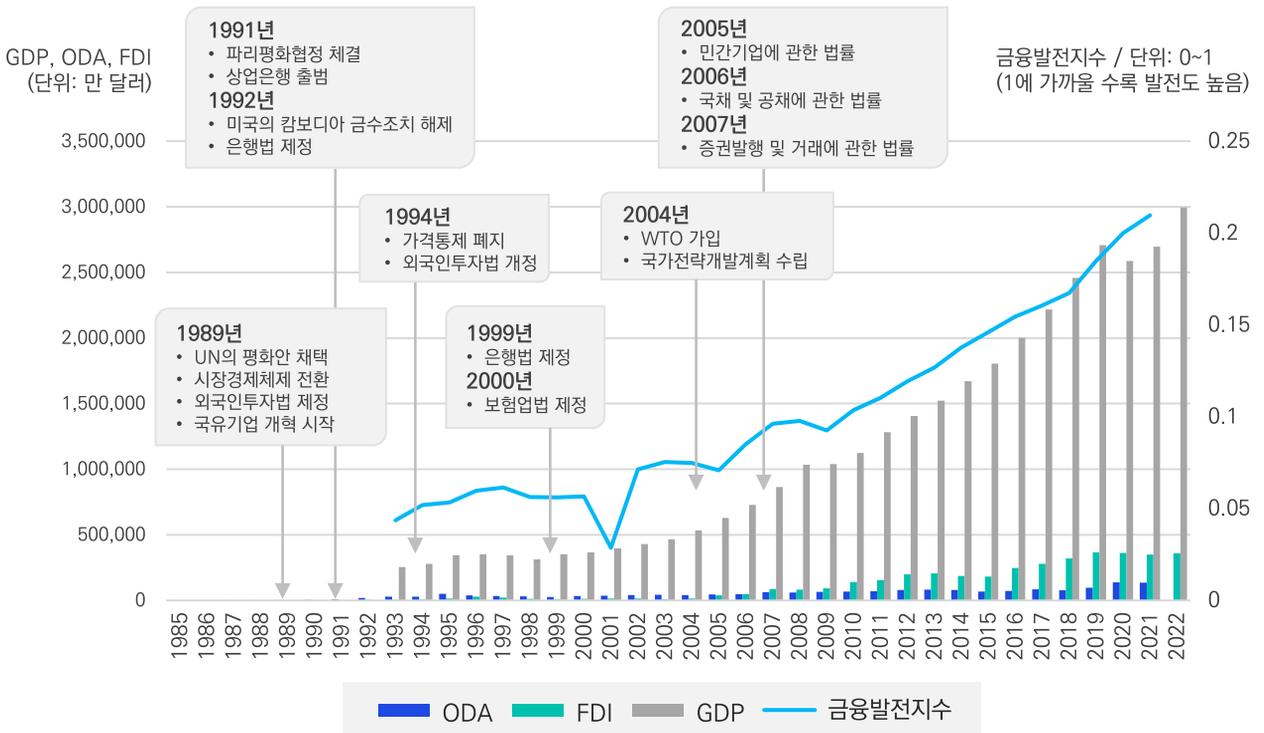
금융발전지수(IMF Financial Development Index)의 경우 WTO 가입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금융제도가 마련되면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 기준 0.21로 세계(192개국) 평균인 0.33에 비해 낮은 상태로 금융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금융시장은 2000년 이후 당국의 적극적인 빈곤퇴치 정책의 영향으로 소액금융업(Micro Finance)이 성장해 온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17개였던 소액금융기관은 2020년 수신 취급 소액대출기관 6개, 소액금융대출기관 76개로 증가하였다. 2020년 현재 상업은행은 51개, 특수은행 14개가 운영 중이다. 증권업은 2012년 거래가 시작되어 2020년 현재 상장사가 7개이며, 보험업은 2020년 기준 보험침투율 1.1%, 1인당 수입보험료 17.5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유엔자본개발기금(UN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17년까지 금융소외계층이 82%에 달했으나 2019년 41%, 2022년 33%로 감소하며 금융 접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금융감독원·삼정KPMG(2021)는 이러한 접근성 개선에 핀테크의 적극적인 도입과 보급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서비스와 ATM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간편결제시스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에서 핀테크를 통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 캄보디아 시장경제제도 도입 후 경제·금융 이벤트와 GDP, ODA, FDI, 금융발전지수 추이



Source: World Bank, IMF,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분석



라오스, 경제 및 금융제도 개혁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이 발전의 핵심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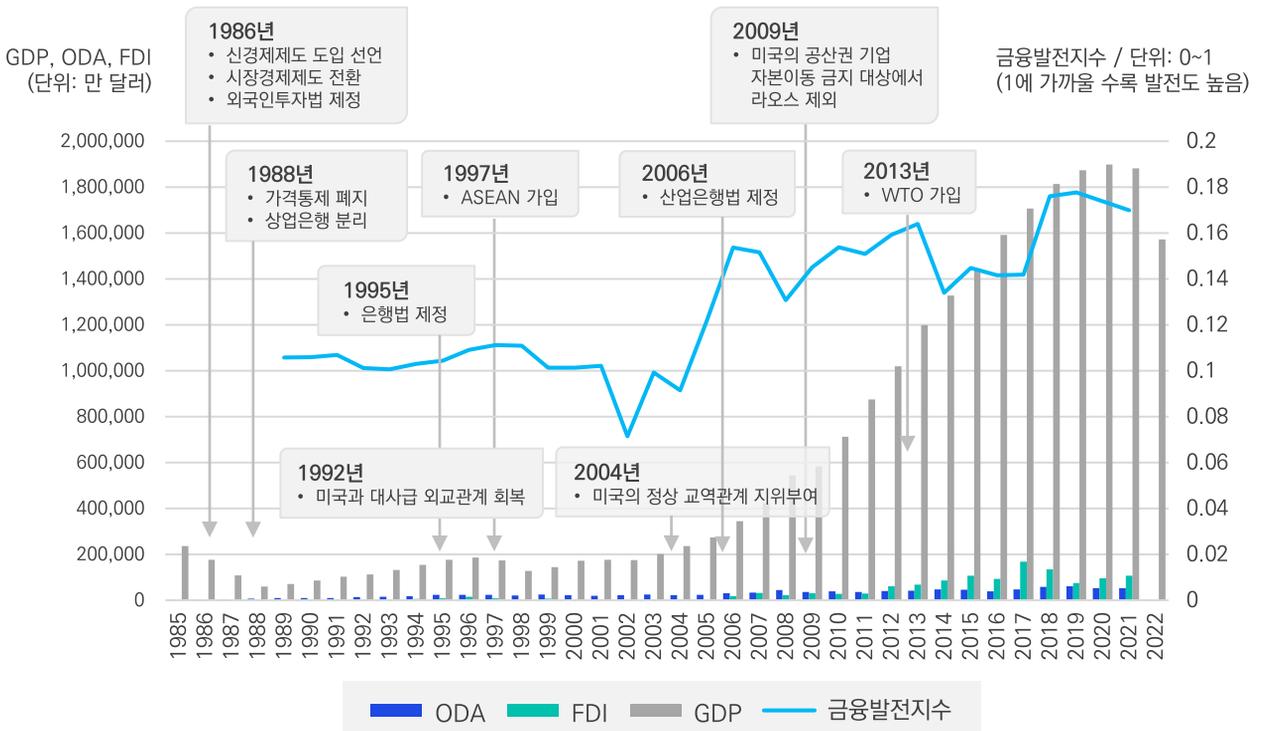
(2) 라오스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면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착수하였고, 1988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와 가격 통제제도 폐지를 단행하였다. 1991년 별개 지점단위 중앙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 상업은행이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재정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은행에 자율성이 부여되었다. 1998년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2007년 상업은행법이 통과되면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은행(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 ANZ Bank)의 진출이 가능해졌고, 이는 라오스 금융산업이 국제표준에 충족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라오스의 개혁개방이후, GDP, ODA, F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86년 이후 한동안 크게 변동이 없다가 2004~2005년을 기점으로 모든 지표의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난다. 2004년 미국의 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 부여, 2005년 미국과 양자 간 통상협정 체결로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금융발전지수는 2006년 이후 0.1에서 0.18 사이에서 등락하며, 2021년 기준 0.17로 세계 평균인 0.33에 비해 상당히 낮아 금융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 라오스 시장경제제도 도입 후 경제·금융 이벤트와 GDP, ODA, FDI, 금융발전지수 추이



Source: World Bank, IMF,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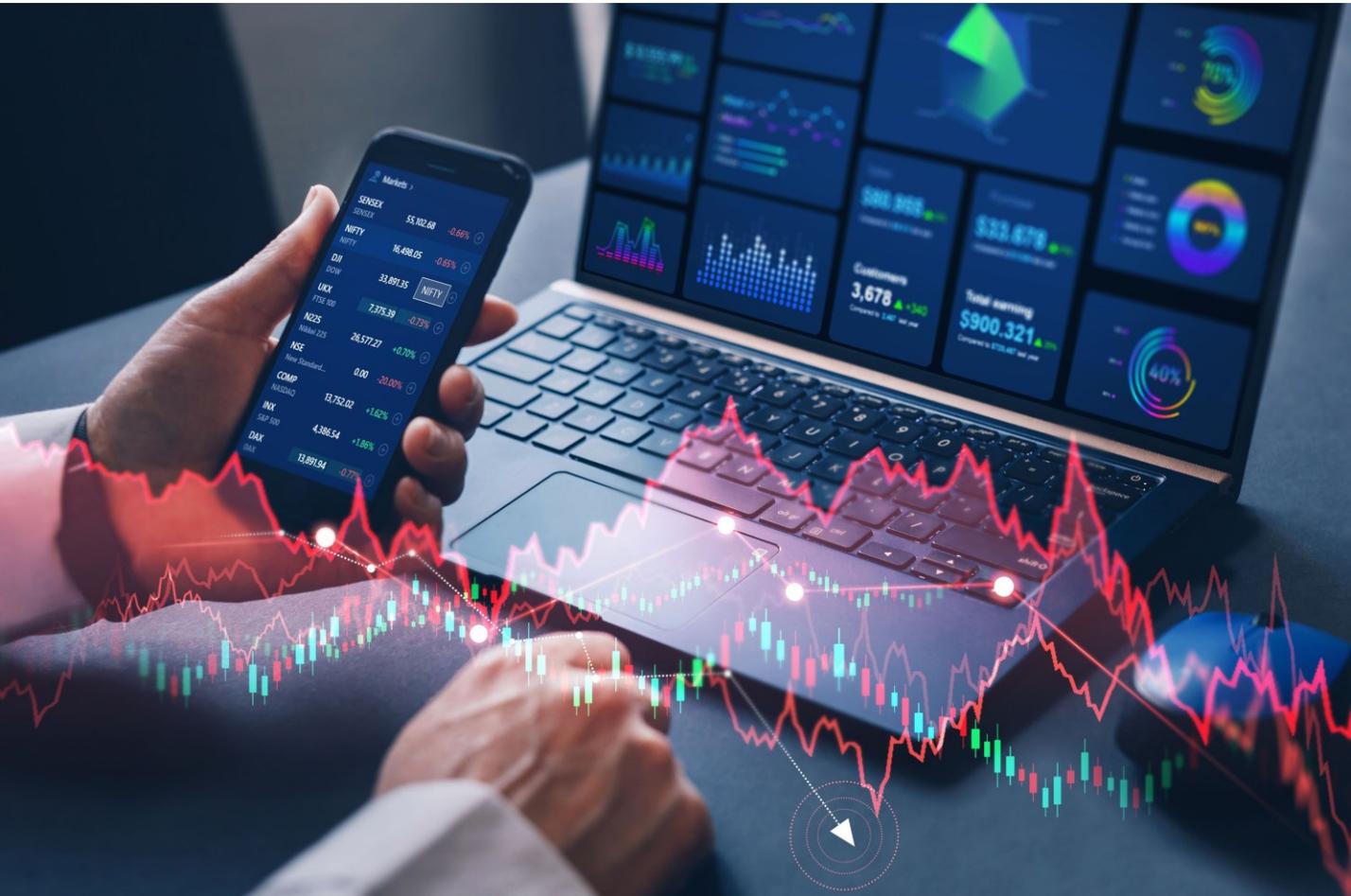
라오스 금융산업은 여신
전문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달, 최근 암호화폐
산업 유치 및 핀테크
적극 도입 노력

”

라오스 금융산업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달해왔고 소액금융, 그 중에서도 소액대출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소액대출업은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꾀하는 당국 정책에 따라 현지 단체와 다양한 ODA 관련 기관, NGO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내구재 및 자동차 할부리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중앙은행, 상업은행(국영 3개, 민영 8개, 합작 3개), 외국계 은행 현지법인(8개), 외국계 은행지점(21개), 특수목적은행(1개)이 운영 중이다. 증권업은 2020년 기준 11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보험업은 의무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장규모가 확대 추세로 10개 이상의 외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조치(2021년) 단행 이후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 승인, 2022년 첫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킵(bitqik) 개소 등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UNCDF와 협업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규제 제도를 마련 중이며, 2021년 표준QR 코드를 발표하고 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핀테크 도입과 보급에 적극적이다. UNCDF에 따르면 금융소외계층은 2017년 71%에서 2020년 48%, 2022년 42%로 감소하였는데 핀테크를 수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미얀마는 2011년, 본격적인 개방 후 국제관계 정상화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재진출, 금융시장 대외개방 추진



(3) 미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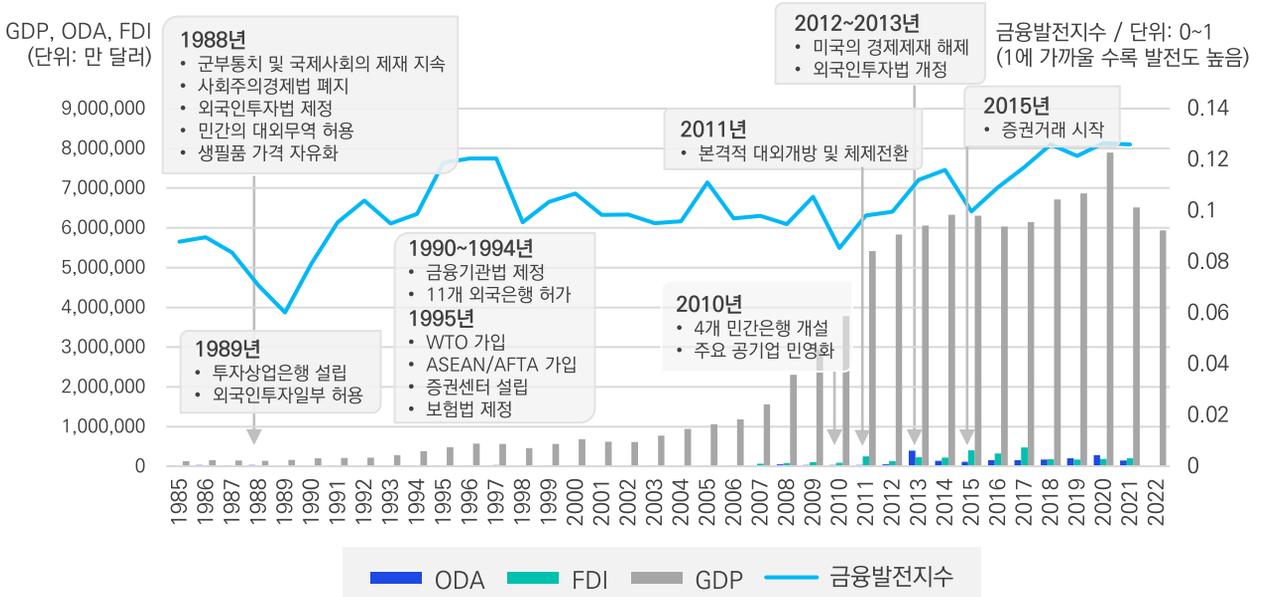
미얀마는 군부정권통치 시기였던 1980년대부터 사회주의경제법 폐지 및 외국인투자법 제정, 투자상업은행 설립, 1990년대 11개 외국은행의 허가, 1995년 WTO 가입, 증권센터설립 등 개혁적 조치를 상당 부분 단행하였다. 미얀마의 GDP, ODA, FDI 추이 확인 결과,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얀마는 2011년 군부정권의 민정이양이 이루어 지면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돌입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및 관계 정상화 이후 IMF와 세계은행도 미얀마에 재진출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6%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을 시작하면서 외국계 은행지점 및 현지법인 영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소액금융 시장도 외국자본에 개방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80여개의 소액금융기관이 영업 중이며 2021년 기준 민영은행 27개, 국책은행 4개, 외국계 은행 현지법인 3개, 외국계 은행 대표사무소 45개가 운영 중이다. 보험업의 경우 국민 1만명 당 2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증권업의 경우 2015년 증권거래소를 개장한 이래 2020년 기준 상장회사는 6개다. 타 CLMV 국가들과 다르게 소액금융업은 2019년 8월 기준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여전히 주민들은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한 가계차입을 선호하고 있다.

금융발전지수의 경우 2011년 이후 0.1 내외로 등락하고 있다. 2021년 기준 0.13으로 세계 평균인 0.33에 비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CLMV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미얀마 시장경제제도 도입 후 경제-금융 이벤트와 GDP, ODA, FDI, 금융발전지수 추이



Source: World Bank, IMF,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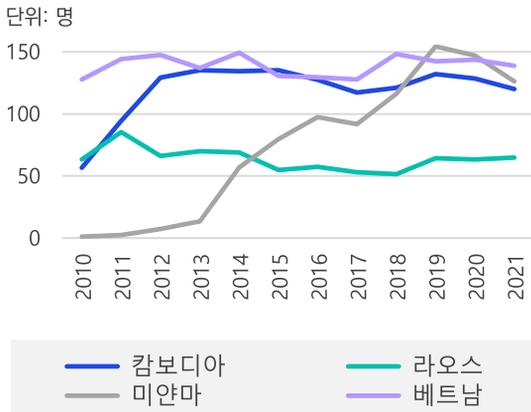
CLMV 모두 휴대전화
사용인구 증가세,
미얀마는 휴대전화
보급과 핀테크 투자 급증



미얀마는 금융발전지수가 최저 수준에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소외 계층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UNCDF에 따르면 미얀마의 금융소외계층은 2017년 74%에서 2020년 42%, 2022년 3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① 2010년 이후 CLMV 국가들 중 미얀마의 휴대전화 보급이 가장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② 2014년부터 2019년 동안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450만 달러)가 확대되면서 금융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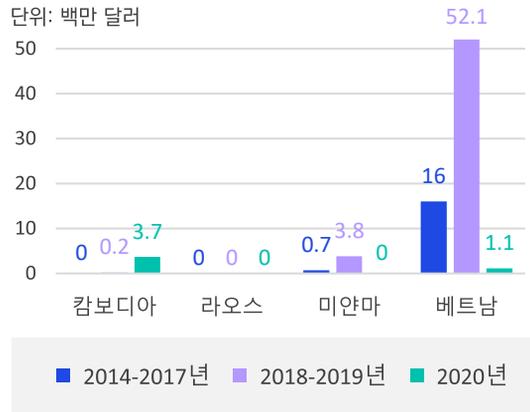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6년 3월 모바일 금융서비스 규정을 발표하며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모바일 채널의 확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CLMV 인구 100명당 휴대전화 보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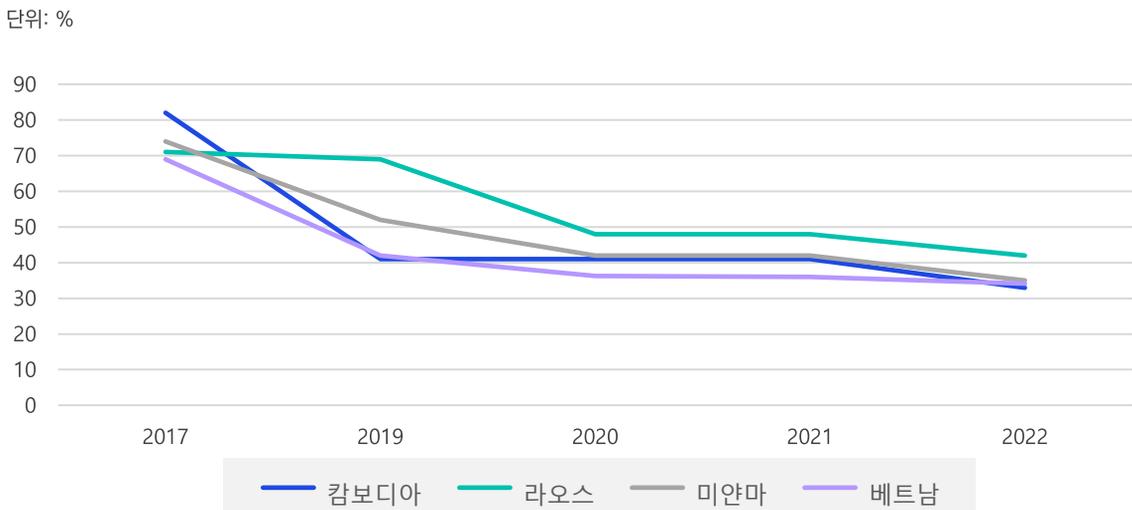
Source: World Bank

최근 CLMV 국가 핀테크 평균 투자액 추이



Source: 금융감독원·삼정KPMG(2021)

CLMV 국가 금융소외계층 비율 추이



Source: UNCDF(2023)



베트남은 1990년대
경제·금융제도 개혁,
국제관계 정상화를 통해
외자유치가 확대되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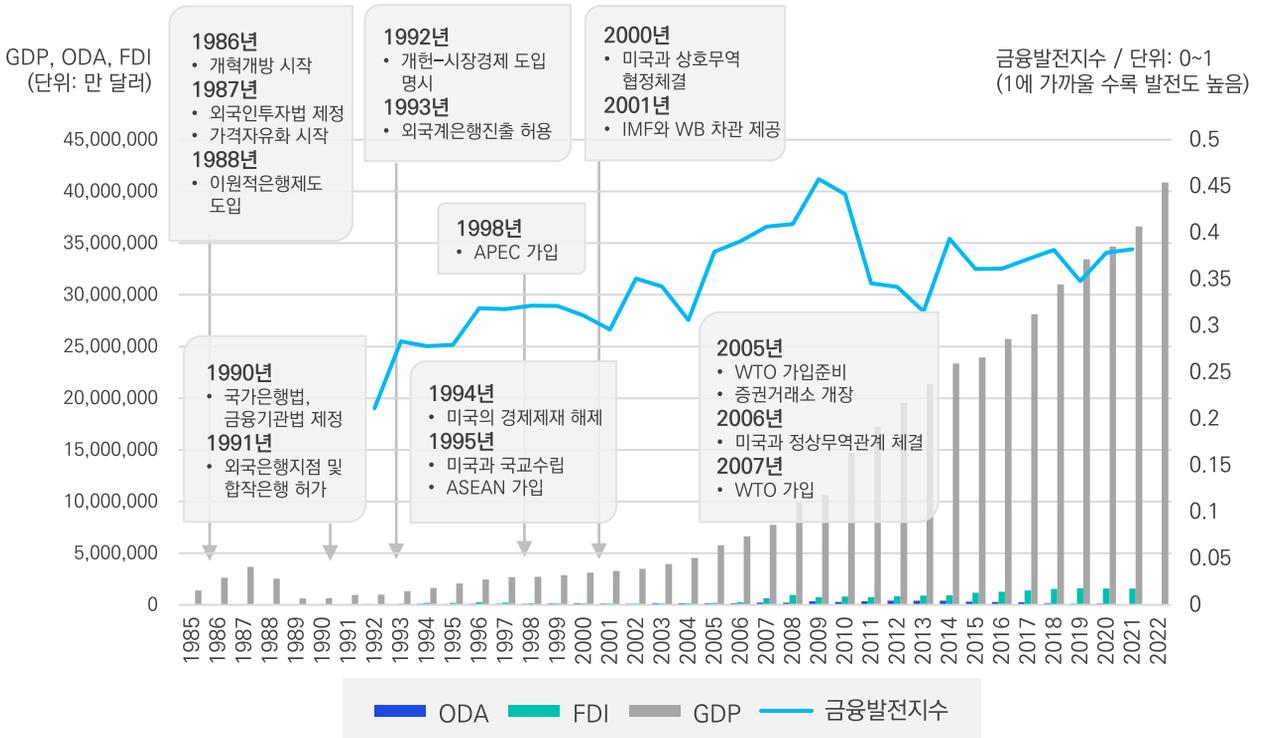
(4) 베트남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1987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및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고 1988년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채택하였다. 1990년 국가은행법과 금융기관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업에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민간합작은행 설립, 외환관리 및 보유 완화, 민간기업 및 농업에 대한 대출 촉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외국은행 지점 및 합작은행 설립이 허가되고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이후 GDP, ODA, F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CLMV 국가들 중에서 가장 월등하게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모든 경제지표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 경제·금융제도의 개혁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지표가 상승하였고 2006년 미국과 정상무역관계(NTR) 체결, 2007년 WTO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금융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금융발전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0.46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다. 이후 0.3에서 0.4 사이를 등락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0.38로 세계 평균인 0.33에 비해 높고 CLMV 국가 중 가장 발전된 수준을 보여준다.

▶▶ 베트남 시장경제제도 도입 후 경제·금융 이벤트와 GDP, ODA, FDI, 금융발전지수 추이



Source: World Bank, IMF,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분석

“

베트남은 1990년대
부실채권 문제 발생,
이후 구조조정 단행과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

베트남은 개혁개방 초기에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누적과 비효율적 경영 문제가 발생하였고 2001년 IMF와 세계은행은 차관제공 조건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1990년대 베트남 은행은 국영상업은행, 민영상업은행, 정책은행,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2010년대 초까지는 신용 및 재무정보 평가기관이 부재하여 국영·대기업 대상 금융이 주요 업무였다. 이후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져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발생하면서 개인 대출도 증가하였다. 주식시장은 2000년에 설립, 2021년 말 기준 749개(시가 총액 약 2,700억 달러)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보험시장은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 개인 건강보험과 보장성 상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18년 베트남 당국은 '2025 베트남 은행업 발전전략, 비전 2030'을 발표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와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행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 청산,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단계적 바젤II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제,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국영은행의 상업은행화를 통해 금융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중산층이 급증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개인,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기성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은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베트남 핀테크 시장은 2016년 7억 달러에서 2021년 말 기준 4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휴대전화 앱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와 전자결제를 중심으로 P2P(Peer-to-Peer) 산업도 성장 중이다.





체제전환국·CLMV 국가의 경제발전은 이원적 은행시스템 도입, 국제사회 관계 정상화를 기반으로 ODA, FDI 등 외자를 유치하고 WTO에 가입하는 것이 핵심과제



체제전환국·CLMV 국가의 금융 개혁과 발전 과정의 시사점

체제전환국과 CLMV 국가들은 개혁개방을 단행한 이후 ①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업은행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정비하였고, ② 경제 및 금융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ODA 및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부실채권 문제는 중국, 베트남, 동유럽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각 국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금융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CLMV 국가들의 사례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ODA와 FDI가 유입되면서 경제발전이 가속화되었다. 2011년 군부통치의 민정 이양으로 본격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WTO에 가입한 미얀마를 제외하면 개혁개방시점부터 WTO에 가입하기까지 평균 21년이 걸렸다.

▶▶ 체제전환국과 CLMV 국가들의 경제개혁 및 금융시장 형성 과정 요약

제도 개혁과 자본 유치	금융업 초기 단계
1 이원적 은행시스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인 중앙은행 기능 분화 기반 개혁 추진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 분리를 통한 상업은행 활성화 	소액금융업 중심의 시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국/국제적 차원에서 소액금융업 지원 중인 CLMV 국가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금융업 활성화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소득증대 도모 초기 설립비용이 적고 수익성이 안정적인 편 소매금융업 중 소액대출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오스, 캄보디아는 ODA 기관, 외국계기업, NGO 단체 등 다양한 기관·기업의 소액대출업 진출
2 국제기구 가입 등 해외자본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과 베트남, 사회인프라 건설 등 경제재건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바, 안정적인 자금공급 역할 위해 별도 '개발은행' 설립 자금조달 관련 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가입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F 가입 시 IBRD에 자동가입 되고, 세계은행 등 타 국제기구 가입 자격 획득되므로 가장 중요한 과제 	핀테크 기술의 적극적 수용·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금융 접근성 + 휴대전화 보급 확대가 주요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CLMV 국가들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반면에 휴대전화 보급률 높아 핀테크 기술 적용에 적극적 온라인 거래, 결제, P2P 중심 애플리케이션 보급 당국차원에서의 핀테크 관련 제도 도입 및 개발·활용 독려
3 부실채권 급증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 관리제도 구축 등 부실채권 예방을 위한 제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상환의무가 없는 재정자금(보조금) 사용, 대출/금융에 대한 인식 부족 은행들은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대출 실시 기업의 낮은 경쟁력, 금융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대출상환 문제 발생으로 부실채권 급증 신용평가제도, 인력교육, 금융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구축 필요 	보험, 증권업 등은 초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에 가입 승인까지 오랜 시간 소요(15~27년) 보험, 증권업은 활성화·안정화에 상당한 시간 소요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서비스 발생

Source: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미얀마 사례는 본격적인 경제개방 이후 핀테크 도입을 통해서 보다 빠른 금융산업 성장 가능성 시사



CLMV 국가들의 금융산업은 ① 당국차원에서 주민들의 빈곤퇴치를 위해 소액 금융업을 장려하면서 발전하였으며 ② 2010년 이후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 확대에 따라 금융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금융시장 서비스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특징을 보였다.

CLMV 국가들 중 미얀마는 2011년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이전인 1990년대 전후에 이미 상업은행이 출범하고 외국인투자법, 증권법, 보험법을 제정, 11개의 외국계 은행 설립허가, WTO 가입 등 경제 및 금융 관련 제도 개혁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10여년이 지난 2000년대 초중반부터 가시적인 경제 성과가 나타났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시작했으나 미얀마는 이보다 늦은 2010년 이후 개방되었고 금융시장은 2014년이 되어서야 개방한 후발주자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저축, 송금, 결제,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로의 확대를 이끌며 금융시장 발전을 가속화했다.

미얀마의 선례는 ① 전반적인 경제 및 금융제도의 개혁과 함께 본격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개혁개방이 추진되어야 경제발전의 시너지가 발생하고 ② 핀테크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형성과 발전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CLMV 국가들의 개혁개방시기부터 WTO 가입까지의 여정

구분	개방시점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상업은행 출범)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WTO 가입	개방부터 WTO 가입기간
캄보디아	1989년	1991년	1992년	2004년	15년
라오스	1986년	1988년	2004년	2013년	27년
미얀마	2011년	1989년	2012년	1995년	-
베트남	1986년	1988년	1994년	2007년	21년

Source: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북한 금융 발전 방안



이원적 은행시스템의 정착과 상업은행 활성화, 금융관련 법규와 제도 마련 등 인프라 구축 선행 필요



북한의 금융부문 현황과 체제전환국 및 CLMV 국가들의 금융시장 형성과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북한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이원적 은행제도의 운영과 국제금융기구 가입,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의 구축, ②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소매금융 활성화와 핀테크 활용, ③ 북한 경제발전 및 개발과 연계된 다양한 투자자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Stage1 금융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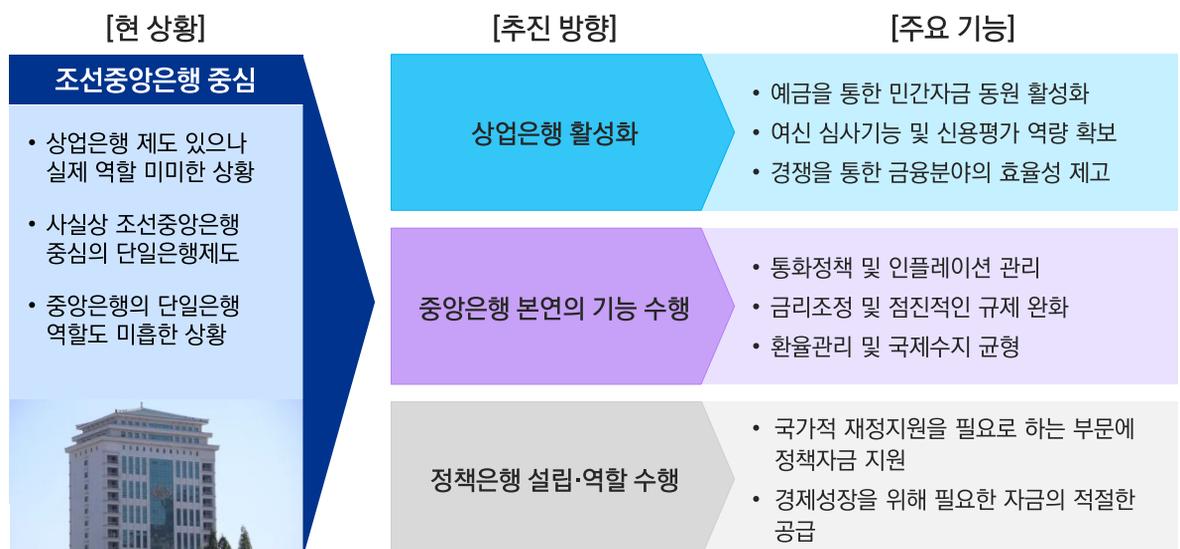
북한 금융은 이원적 은행제도 활성화, 정책금융기관 설립, 국제금융기구 가입·활동, 예금보호·지급결제·관리감독 제도 등 법·제도 구축, 신용심사 및 리스크 관리·평가 시스템과 부실채권 대응 제도 마련, 회계 및 기업데이터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다.

(1) 실질적인 이원적 은행제도 운영과 주민 신뢰 확보

북한은 제도적으로 상업은행 분리를 통한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마련했으나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은행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정비와 개혁이 필요하다. 은행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호응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상업은행이 제 기능을 할 때 예금을 통한 민간자금 활용, 신용평가 역량 확보,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경제재건·개발 과정에서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북한이 2011년 설립을 검토 한 바 있는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실질적인 기능 분화 추진



Source: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

북한은 국제개발자금
유차·운영, 금융 관련
법·제도 도입, 신용심사
및 리스크 관리, 평가
시스템 구축 등 금융
인프라 정비 필요

”

(2) 국제금융기구 가입·협력

북한이 해외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원조, 장기저리융자, 투자사업융자 및 장기개발자금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는 한편,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 및 정책자문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EU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기반으로 FDI 등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 환경을 조성되어야 한다.

(3) 금융 관련 법규 및 제도, 인력교육 등 금융 인프라 정비

①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한 법규·제도 구축

우선적으로 예금보호제도의 도입, 금융결제원·증권예탁결제원 등 지급결제 관련 제도 구축, 환결제 제도 개선,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법규 마련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전화를 통한 모바일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의 제도화를 통해 핀테크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② 신용심사 및 리스크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신용심사, 리스크 관리,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실채권의 양산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 축적, 담보평가와 관리에 따른 심사와 대출운용과정의 리스크 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기관 및 기업들은 고도화된 신용심사 및 리스크 관리 노하우, 체제전환국 및 CLMV 국가에서의 협력 경험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국제금융기구별 주요 가입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 가입조건은 없으나, 주요 경제지표 제출 요구(가입 시 쿼터(quota) 산정을 위한 외환보유고, 국민소득, 무역액 등 경제지표, 주요통계의 정확성 등이 전제는 아님) • IMF 상임이사회가 가입 추천 시, 총회는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가입국 참가 투표 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 승인 (투표권 1/3 이상 보유국인, 미국, 일본, 서유럽 반대 시 가입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IMF 회원국만 가입자격 부여 •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 IBRD 회원국 부여 • IMF 가입심사 통과 시, IBRD와 IDA가입은 통과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 또는 유엔 회원국이면서 선진국에 가입자격 부여 • ADB는 총 투표권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2/3 이상 가입국 찬성 필요 (미국과 일본의 투표권 비중이 각 12.784%로 가장 높기 때문에 두 국가가 반대하면 가입 불가) • AIIB는 ADB 또는 IBRD 회원국이여야 가입 가능, 회원국 총 투표권의 1/20이상 보유하는 1/2 이상 회원국의 찬성 필요

Source: 한국수출입은행(2016)

“

부실채권의 정리, 북한
기업의 회계 및
기업데이터 구축,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
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

”

③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

체제전환국들은 금융부문 개혁 과정에서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도 부실채권 문제를 겪을 가능성을 대비해 개혁 초기 단계부터 부실채권 관리 및 심사체계 구축과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④ 북한 기업의 회계 및 기업데이터 구축

개혁개방 초기에 북한 기업들은 회계, 기업데이터, 신용평가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기업들도 기업 회계 및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노하우 습득을 통해 투유자를 위한 기초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금융전문인력 양성

북한은 2019년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 경영전문가 (MBA)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국내 금융기관 및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은 직원의 직급별, 전문분야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북한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융전문가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에 금융업의 위험관리, 대출심사, 담보평가, 자금 및 회수관리 등 금융기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기법과 경험 전수를 통해 북한의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남북 상호 간의 금융체제에 대한 이해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

지역단위 소액금융업과
휴대전화를 활용한
온라인 소액금융업
우선 도입 고려

”

Stage 2-1 소액금융 서비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수의 빈곤층은 금융 접근성의 제약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자력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고리대금 등의 비공식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CLMV 국가들은 지역단위의 소액금융업을 장려하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민들의 빈곤퇴치와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 역시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발전의 속도, 사금융의 영향력으로 인해 주민들의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소액금융업과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 접근성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 소액금융업

소액금융업은 소액대출,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포괄하지만 경제 개방 초기에 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소액대출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도 호주 마라나타 신탁회사의 소액대출사업과 국제농업개발 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에서 실시한 소규모 대출사업이 주민들의 호응과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에서도 소액금융업, 특히 소액대출사업의 수요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미 캄보디아, 라오스 등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주민들의 빈곤퇴치 정책의 일환으로 소액금융업을 장려하면서 시장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수익성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기계, 자전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재에 대한 소액대출 및 할부금융을 제공하여 현지에서 기업의 인지도를 높여 향후 사업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협력을 통한 북한 내 소액금융사업 사례

코리아 마라나타 신탁회사의 소액대출(2004)

- 호주 마라나타 신탁회사와 북한 재무성의 합작
 - 북한 공장, 소기업, 주민들에게 소액대출 지원 목적
- 사업현황
 - 평균 2,000 유로 수준의 소규모 대부금 제공
 - 2005년 기준 대부 이자율은 12%, 대출 회수율 100%
 - 2005년 기준 총 12만 유로 대출

IFAD의 북한 빈곤 극복 사업 재정지원(1996-2008)

- 기간 중 약 6,900만 달러의 기금 지원
 - 잠업개발(1996-2002), 축산복구지원(1997-2003), 산간지대 식량안보(2001-2008) 사업을 위한 기금
- 사업현황
 - 조선중앙은행이 IFAD의 지원금을 받아서 군 단위 지방은행에서 대출하는 온랜딩 방식
 - 대출을 받아 생산활동에 활용한 후 생산물을 협동농장에 되팔아서 상환
 - 가구당 대출액은 70달러 미만, 이자율 5%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

소액금융업은
북한 돈주와의 마찰을
줄이고 사금융의 제도권
흡수 역할 가능

”

2015년 신한은행이 미얀마 정부와 추진한 ‘농기계 수입대금 지원을 위한 중장기 수출금융지원사업’은 포용적 금융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5년 미얀마 농촌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장기저리의 외화 대출을 지원하여 2015년 7월 미얀마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후 2016년 11월 국내 은행 최초로 신한은행 미얀마 지점 설립에 성공하는데 동 사업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북한에서 지역단위 소액금융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포용적 금융으로 북한 내외부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며 추후 금융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용이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액금융업은 지역의 사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돈주와의 마찰을 줄이면서 제도권 금융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즉, 북한 돈주들을 각 지역 내 소액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면 사금융을 공식금융으로 흡수하는 동시에 운용자금을 확보하는 데 수월할 것이다. 초기에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소액금융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성장 가능성과 확장성이 높은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방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새마을금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고를 중심으로 주민 저축을 통해 자금을 축적하고, 축적된 자금으로 사업자금 대출, 마을 개발과 경제사업에 투자해 소득 증대를 꾀하는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은 향약, 두레, 계 등 오랜 전통을 통해 계승된 지역공동체 기반의 금융 활동을 공적화 한 형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거부감 없이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

간편결제, 온라인·모바일 송금 등 핀테크를 활용한 북한 주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

”

(2)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 접근성 제고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낮은 동남아시아의 핀테크 발전 속도는 우리나라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글로벌 서비스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동남아시아의 지급·결제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고젝(Gojek), 싱가포르의 그랩(Grab) 등은 빅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CLMV 국가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핀테크는 ① 휴대전화를 활용한 간편결제 및 송금과 ② 온라인 은행(Neo Bank)이며 ③ 자금조달 및 대출(P2P), 인슈테크, 자산관리, 핀테크 인에이블러 산업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북한 역시 전자카드와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보급을 위해 노력 중이고 전국적으로는 주민들 간 휴대전화 송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 북한의 전자결제시스템과 전화돈 등은 핀테크의 초기 수준이지만 앞으로 ① 휴대전화의 보급 확대, ② 과학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개발 지속, ③ 전세계적인 핀테크 도입과 상용화 환경 등으로 인해 핀테크 분야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급결제서비스는 소비자의 가장 빈번하고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로, 소비자-기업-판매자 간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사용자의 서비스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시장 형성 초기에 북한 주민과 기업·판매자에 대한 락인(lock-in)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핀테크 산업의 유형별 CLMV 대표 기업들

	간편결제/송금	온라인 은행	자금조달/대출(P2P)	인슈테크	자산관리	핀테크 인에이블러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캄보디아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라오스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미얀마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베트남 </div>						

Source: 금융위원회·삼정KPMG(2021),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

개혁개방 초기부터
슈퍼앱 전략을 통해 젊은
세대 대상 임베디드
금융업 추진 고려

”

베트남에서 2014년 전자결제서비스 1세대로 시작한 ‘모모(Momo)’는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종합적인 생활금융 플랫폼인 ‘슈퍼앱’으로 발전한 사례다. 모모는 베트남 정부의 ‘현금없는 결제를 위한 개발 계획’ 정책에 맞게 영화, 여행, 공공요금 지불, 기부, 보험가입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수년 간 베트남에서 지급결제 서비스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방안 이외에도 IT 기술을 쉽게 받아들여 활용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임베디드 금융업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북한의 택시나 오토바이, 자전거, 식음료 등 비금융업을 모태로, 초기부터 슈퍼앱 전략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그랩(Grab)은 동남아 전역에서 차량호출, 음식배달, 택배서비스 업종에 집중하면서 수집한 수천만명 고객의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용평가기법을 개발, 2017년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랩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인 그랩페이(GrabPay)를 출시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소액대출, 소액투자, 신용평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① 지급결제(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과 ② 비금융업 사업을 토대로 임베디드 금융으로 접근하는 두가지 방안을 모두 고려해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금융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금융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임베디드 금융업 정착을 위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과제다.

▶▶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모모와 그랩의 전략

구분	모모	그랩
금융업 접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지급결제서비스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차량호출과 음식배달, 택배서비스를 통해 고객 데이터 활용, 신용분석 기법 개발·적용 2017년 간편결제서비스 그랩페이 출시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70여개 은행 및 카드사 협약하여 결제, 할부금융, 소액투자, 보험 등 금융서비스 제공 2023년 3월 이후 해외송금서비스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결제서비스 그랩페이 소액대출, 소액투자, 보험, 신용평가서비스 등 전반적 금융서비스 제공
전략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결제서비스로 시작하여 영역 확대 베트남 내에서 영화, 항공권, 호텔, 공공요금 지불, 기부, 보험 등 100가지 이상의 서비스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융업(차량호출, 배달·택배 서비스) 기반으로 금융업 진출 동남아 전역에서의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서비스 영역 확장 중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지갑(E-wallet)방식을 적용, 현금충전 방식, 간편송금 및 사용자 간 상호충전 가능 은행계좌가 필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동남아 지역의 특성에 부합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경제개발을 위해 개혁개방 초기 국제금융기구 기금 활용, 이후 PF 및 부동산 신탁 등 민간투자유치 고려



Stage 2-2 개발·기업금융 서비스: 대북 투융자 방안

앞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 금융업으로의 진출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기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등에 국내은행 지점 개소와 같은 형태의 진출이 가능할 것이며 추후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시설투자자금과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개발과 관련된 투융자부문에서 상당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가능한 개발금융 및 기업금융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북한에 관심있는 이해당사국과 북한개발신탁기금, 대북투자기금 조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동 사업에서 우리 기관의 참여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여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 경제개발이 시작되면 경제특구 중심의 개발사업, 도로 및 철도, 에너지 인프라 개발 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함께 민간투자를 유치, 확대해야 한다. 민간투자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와 부동산 신탁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수익 회수 역시 북한이 선호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통해 대북투자 위험을 분산하거나 안정화하여 투자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대북 투융자 방안

구분	방안
국제공조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리의 참여를 최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개발신탁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경제개발에 관심있는 이해당사국들의 ODA 자금 모집 - 주도권 확보를 위해 높은 참여비율 확보 대북투자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과 이해당사국 정책금융기관과 국부펀드가 지분 참여 - 북한이 추진한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설립 정책(2011)과 부합
민간투자 유치 유인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부동산 신탁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민간자금의 조달 및 대북 투자사업의 위험분산 - 부동산 신탁은 투자수익 확보 및 배분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 또는 한국투자공사의 대북투자사업 신용보강 투자자금 및 투자수익 회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재산 소유권 불인정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선호(개성-신의주 고속철도계약서(2014), 원산-금강산관광특구 투자제안서(2016),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2013))
단계적 추진 특구, 장려부문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당국의 적극적 관심 유도를 위한 장려부문의 투자 우선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 -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부여,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기업소득세율의 하향조정 부과
북한의 위험분담 불확실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 투자 안정성 제고 위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투자보증기구 활용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先가입필요 북한의 위험분담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투자기금에 북한의 지분 참여 - 북한개발신탁기금이 북한 외채를 시장가격으로 인수, 인수금액에 상응하는 권리를 북한 당국으로 얻어내 대북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분담 유도
기술 개발, 보건의료 관련 자원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에 시급한 기술개발과 보건의료사업 관련 ODA 등 국제개발기금 지원

Source: 한국금융연구원(2018) 내용 토대로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

북한개발신탁기금,
대북투자자금 조성
모색하되 북한 당국의
참여로 리스크 분담 필요

”

셋째, 단기적으로는 특수경제지대에 외국인 투자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지점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합영은행에 비해서 투자회수의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나, 외국기업과의 경쟁도 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경제지대의 특성상, 북한이 장려하는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이 우선 투자유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제 경쟁력과 우위를 가진 분야의 외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모든 과정에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 투자 위험분담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의 활용, 북한의 지분참여, 외채의 활용 등 단계적인 추진전략 수립 후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개발, 보건의료 사업 관련 재원조달을 지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만하다. 기술개발과 보건의료 재건사업은 ODA 등의 국제개발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의 가능성도 높다. 북한의 기술개발 및 보건의료 재건과 관련된 금융상품 분야의 협업 경험이 쌓이고 신뢰가 형성되면 추후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이 안정화되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시기에 진입한다면 북한도 WTO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주식과 채권시장 형성, 보험업 활성화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와 금융시장 발전에 따라 탄력적 협력방식을 추진하고 북한 현지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파트너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협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북한 금융 발전 전략



Source: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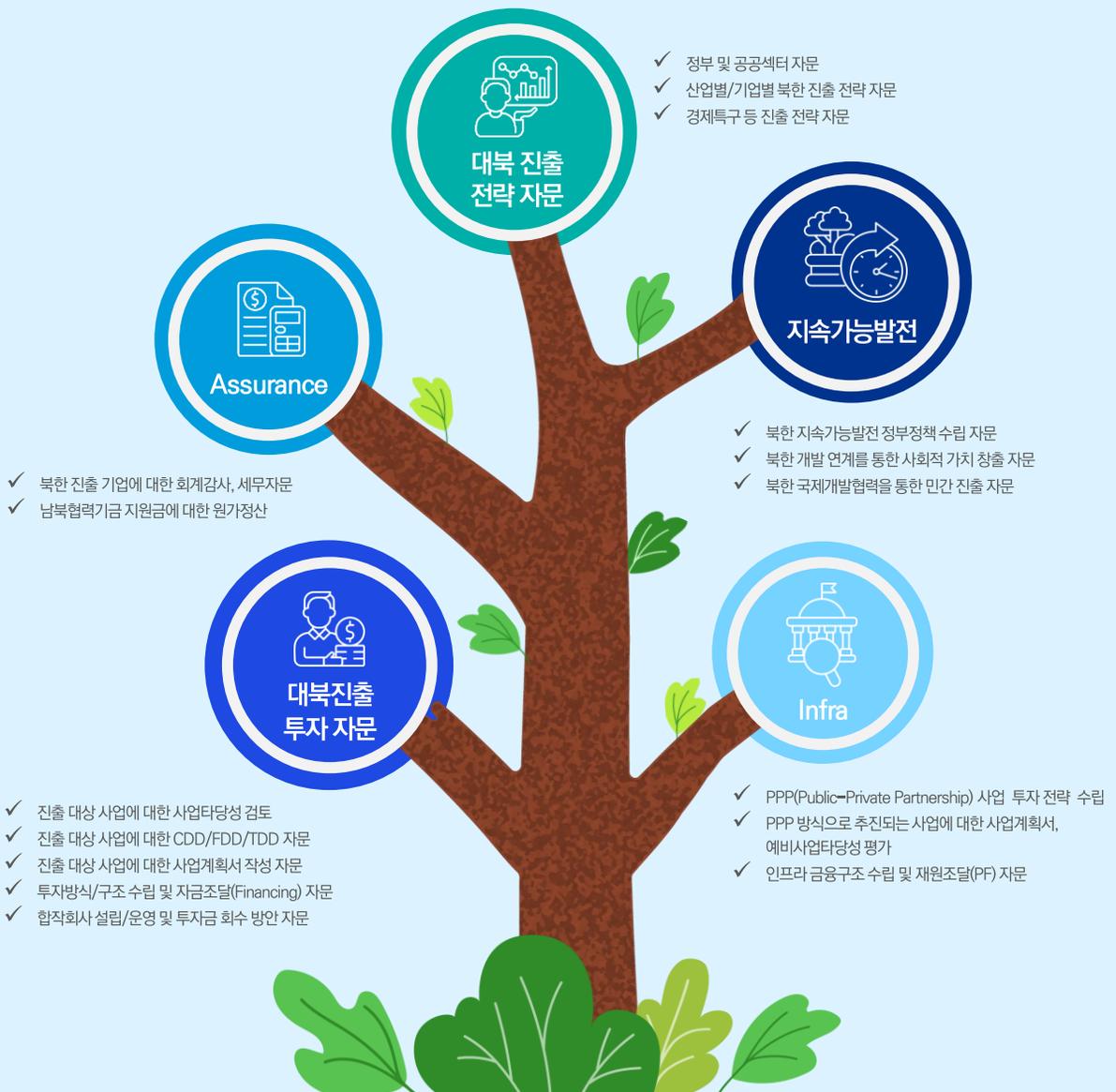
참고 문헌

1.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22), 금융정보 Country Brief
2.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21), 라오스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3.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21), 미얀마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4.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19), 캄보디아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5.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18), 베트남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6. 금융위원회 · 삼정KPMG(2021), 2021 아세안 주요국 핀테크 산업
동향 조사
7. 김민정·문성민(202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8. 박은진(2018),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KDB산업은행
9. 박해식·이윤석(2018),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0. 손광수(2020), 북한 주민의 전화돈 활용 사례 연구,
KB금융지주연구소
11. 양문수·권태진·민병기·이동현(201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12. 최이섭·이윤석(2020), 주요 체제전환국 금융개혁 사례와 남북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포럼, 13(3)
13. 코트라(2021.6), 비상사태 이후 흔들리는 미얀마 금융산업
14. 코트라(2021.5), 전통 금융서비스를 건너뛴 베트남의 핀테크산업
15. 코트라(2020.7), 베트남 은행업 동향 및 향후 발전 방향
16. 코트라(2015.6), 거듭 성장하는 캄보디아 은행업
17. 코트라(2014.9), 은둔의 땅 라오스에서 태동하는 금융산업
18. 통일부 북한정보포털(검색일 2023.8.23)
19. 한국수출입은행(2016), 북한의 금융
2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21. UNCDF(2023), 2022 ASEAN Monitoring Progress:
Financial inclusion in selected ASEAN countries

How KPMG can help

삼정KPMG는 남북경제협력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2014년 6월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회계감사와 세무자문, 재무자문, 컨설팅 등 3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북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북한 진출 전략, 사업 타당성 평가, 자원조달, 개발 및 투자 자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정KPMG는 산업전문가로서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내다보고 2년여의 연구와 협의를 거쳐 2018년 4월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을 출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삼정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서비스 소개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